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 “끝까지 밝혀줄게”

홍미리 기자 | 승인 2014.11.02 17:31

“특별법 제정 이제 첫발 때...4.16 약속지킴이 되자” 10가지 약속



▲ 세월호 참사 200일 맞은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이 노란리본과 밴드 등을 들어보이며 세월호 참사가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200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유가족과 함께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촛불을 밝혀든 채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진상규명, 철저한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전날인 10월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한 내용이 성에 차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첫발을 뗐다면서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 상자 여야 합의사항 전문 참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11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가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예은 아빠)은 대회를 통해 “참사 200일이 되는 오늘 함께 추모하는 자리지만 아직은 추모할 때가 아니”라면서 “9인의 실종자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고 진심으로 추모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뛰어나는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고 “유가족들이 국민을 믿고 앞장설 테니 국민들은 우리 뒤에 오면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엄마의 200일'이란 제목의 추모영상이 상영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 변백선 기자

추모집회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을 향해 반드시 꼭 그렇게 하겠노라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박래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오후 가족들이 준비한 추모식에서 한 생존학생이 친했던 친구에게 쓴 편지를 읽었는데, 미안해서 친구 엄마 아빠 앞에도 못서겠다고 했다”고 전하고 “그 괴롭고 힘든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왜 미안해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공동운영위원장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으로 넘어갔지만, 아이들 이야기만 나와도 울고불고 하는 그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만든 특별법이고, 정치가 부재하고 실종된 상황에서 유가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이 식을까 걱정”이라고 말한 박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답게 돈과 이윤보다 사람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 사람 중심인 사회,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대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밝혀줄게”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줄게”라고 수차례 외쳤다.

‘엄마의 200일’이란 제목의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단원고 2학년 세 희생자 학생 엄마들의 육성과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절규 섞인 활동 모습이 펼쳐졌다. 4월 16일 소식을 듣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엄마와 아빠들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며 청와대로 향했고, 국회에서 외쳤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엄마들은, 아빠들은 지옥 같은 200일의 시간들을 국민과 함께 하며 견뎌냈다.

가수 이상은 씨 노래 공연 중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널 사랑해~”라는 가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무대 영상막에는 희생자 아이들의 캐리커처와 함께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리며 쓴 글들이 새겨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케 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각 지역대책위 대표들과 동혁엄마 김성실 씨가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 참가자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4.16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며, 기억의 약속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국민간담회를 열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밝혀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말하고, 언론이 전하지 않는 소식을 널리 알리고, 광장과 거리에 모여서 함께 행동하고, 세월호 참사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며,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 추모대회 참가자들이 "끝까지 밝혀줄게"라고 적은 손피켓과 촛불을 들어보이며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 줄게"라고 수차례 외쳤다. © 변백선 기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위험이 무엇인지 지목하고 위험을 멈추고, 우리가 길이고 진실이고 안전이며 우리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 상자 선언문 전문 참조)

노동자와 시민들은 각자 지닌 세월호 약속을 상징하는 노란 팔찌와 노란 목걸이, 노란 배지, 노란 풍선을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치켜든 채 앞으로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디선가 함께 하고 있을 희생자들을 향해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대회 후 유가족이 선두에 선 가운데 노동자,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벌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대오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200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결의했다.



▲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대회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편 범국민대회 개최에 앞서 권순필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장은 “성균관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세월호 유가족과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하고 “대학생이 정의와 자유, 진리를 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정치집회라며 불허하고 학생회장 장학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정치인이냐?”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서를 낭독했다.

세월호 참사 200일, 국회본청 앞 농성 113일, 광화문광장 농성 111일, 청와대 앞 농성 72일을 맞은 11월 1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행사가 종일 이어졌다.

82국 세월호를 생각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조계사 경내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한 82국 제2차 가을바자회>를 펼쳤고, <416FM 세월호 참사 200일을 기리는 연극인과 시민 200인 플래시몹>이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주최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오후 1시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가족 추모식>을 가졌고, 세월호 게릴라 음악인들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전국문화예술인행동도 <세월호 참사 200일, 문화예술인 행동선언>을 개최했다.

23개 청소년 학생회·동아리·학생회연합·학생단체 등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청소년 추모의 날>을 진행했고, 범국민추모대회에 앞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청계광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를 마련했다.



▲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대회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사항

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정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때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2.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4.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5.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6.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7.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특별법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진실과 안전을 향한 길,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억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그저 큰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기억시키려는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히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권력을 지키는 습속이 뻗속까지 배어든 기업과 국가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의 기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진실을 가로막는 세력과 마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든 묻어 덮으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했습니다. 5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에 대한 국회의 응답은, 성역 앞에서 흔들리는 누더기 특별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성역을 쌓아가며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감사원도, 국회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멈춰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안전을 가로막는 세력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든다는 등 소리만 요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안전을 혁신하겠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꾸로 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위험을 늘리는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안전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특별법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쥐는 연장일 뿐입니다. 미완의 특별법에 그친 여야 합의 소식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연장이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대를 배웠습니다. 가족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맞잡게 된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멈추는 순간 어떤 연장도 무력해지며, 우리가 길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연장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우리의 길을 집요하게 가로막겠지만 굽힘없이 거침없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바로 진실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사회, 우리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4.16 약속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가 기억입니다. 기억의 약속으로 노란 리본을 달겠습니다.
- 우리가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 우리가 기록입니다. 국민간담회를 열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겠습니다.
- 우리가 질문입니다. 밝혀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 우리가 소식통입니다. 언론이 전하지 않는 소식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 우리가 외침입니다. 광장과 거리에 모여서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우리가 치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겠습니다.
- 우리가 진실입니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가 안전입니다. 위험이 무엇인지 지목하고 위험을 멈추겠습니다.
- 우리가 길입니다. 우리가 진실이고 안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 참가자 일동